

| 토론회_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강은영 <참여와혁신> 취재기자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2019.4.5.(금), 13:30~16:30,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개회사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좌 장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발제**
 -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의 노동교육진단과 미래발전방향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토론**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 **송달용**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
 - **강승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
 - **이승희**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2019년 4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2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모색」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인권교육 강화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동력인 동시에 노동존중사회의 구현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노동존중사회는 무엇보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법 준수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노사 어느 일방의 이해득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디지털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포용적 성장과 공존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동인권 교육지원의 실태와 과제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회에서는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동인권 교육지원의 실태와 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고용노동부 요청을 받아 진행된 전국의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8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67개 기관(단체)에서 총 211개의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내용은 주로 노동법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이며 노동인권이나 노동조합, 노동 3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노동인권교육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육대상에 따라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을 예로 들어, “학생의 경우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노동인권 교육을 관할하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관할한다. 학생이 아닌 미성년 노동자의 경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고, 지도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경우 주무부처가 법무부로 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실태도 설명했다. 연령 측면의 '청년 노동자'와 성별 측면의 '여성 노동자', 근로조건 면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고령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의 노동인권교육 개선을 위해 교육을 체계화하고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조직(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노동교육의 진단과 미래방향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노동교육의 진단과 미래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326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94.8%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노동의 가치와 인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96.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58%에 그쳤다.



학교별로는 특성화고에서 95%가 교육을 진행한 반면에 일반계고는 59%, 초·중학교의 경우는 50%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이 교육을 진행한 특성화고가 교육을 실시한 배경으로 ‘교육부, 교육청의 지침’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9.6%였다.

정 연구위원은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교사들 중 71.5%가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가 없는 것이 교육을 진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사범대학 재학 당시 노동인권교육 관련 수업을 수강한 경우는 10%로 집계됐다. 정 연구위원은 교사로 재직 중에도 교육 관련 연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3%가 참여한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조화로운 노동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편 ▲노동교육의 상시 교과목 지정 ▲경제의 하위차원으로의 노동교육 탈피 ▲단순 지식전달에서 심화교육으로 전환 ▲사범대·교육대 노동인권교육 필수지정 ▲교사들의 노동교육 연수 확대 ▲대학 노동

교육 강화 ▲기업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동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인 사회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가칭)노동교육 활성화 위원회’를 만들고 사회부총리가 주재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새롭게 노동교육의 체계화 방향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제를 맡았다. 송 교수는 노동인권교육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개념이며,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일차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핵심개념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퇴직과정에 이르기 전까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구분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통합적 인식단계 ▲통합적 인식과 실용적 분석 단계 ▲실용적 활용단계로 구분해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노동교육을 위한 거버넌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산 중복된 교육의 체계화 ▲지역적 편차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 소통과 협의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지역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협의회’ 설치를 통해 지역의 수평적인 노동인권교육 채널과 협의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위해서는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인권교육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의 가치와 개념이 무엇인지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정규교육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노동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원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노동인권교육이 노동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며 사업자를 위한 노동교육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노동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의무도 교육에 포함되어 균형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은 그 동안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던 점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강승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

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노동기본권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강 사무관은 고용노동부가 중심에 서서 협업체제를 구성하고 콘텐츠 개발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더 내실화하여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달용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실습 기간 동안 자신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장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특성화고에 전담 노무사를 배치하고, 상시적으로 학생들이 상담을 하거나 실습 장소를 관리규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사업주들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 노동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의 다양한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법 제정 사전단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의견수렴을 비롯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달용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

이승희 광주청소년노동인권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열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소개했다. 지난 2013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중등용 청소년노동인권 참고용 교재를 발간하고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광주 사례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이 훼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승희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